

中國의 해양관리組織과 해양政策 고찰

김 주 형* · 김 민 종**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관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담당 사무관

A Study on China's Maritime Organization and Ocean Policy

Chu-Hyong Kim* · Min-Jong Kim**

* ** Port State Control Officer,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MLTM

* Major in Maritime Law & Policy(Ph.D Cours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World Maritime University, Malmö, Sweden

요 약 :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첩해5룡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점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핵심용어 : 중국해양정책, 집법기구, 첩해5룡, 국가해양국, 해사국, 11.5계획, 국가해양사업발전요강

ABSTRACT : It is said that China's maritime organizations are large-scaled and complicated things, so-called 5 dragons in Chinese ocean. Therefore that has caused several matters and inefficiency in many maritime fields. However Chinese leaders have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ocean and have pursued consistent policy in their ocean, for example, 5.11 project,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etc. As a neighbouring country contrasting with China on Yellow Sea, Korea shall study China's ocean policy and their features in maritime organiz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ense competition in future at sea.

KEY WORDS : China's ocean policy,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5 dragons in ocean, 11.5 project,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I. 서 론

지난 1982년 유엔해양법(UNCLOS)의 채택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해양개발과 관할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대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동북아의 끝단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인접국 중국과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근세에 들어서도 조선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더욱 긴밀한 인과관계를 맺어온 것이 사실이며, 국토분단과 냉전시대에 단기간의 국교단절이 있었지만, 1992. 8. 24 국교재개 이후 최대무역상대국¹⁾이 된지 오래다.

1)수교 당시 중국측 통계로 50억불 수준에 불과하던 한중 교역규모

II. 중국 해양관리조직의 구성과 주요업무

.....(중략).....

1. 해사안전관련 기관

1.1. 해사국(海事局)

1.1.1. 조직구성

중국 해사국은 교통운수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은 4실(관공실, 환경보호관공실, 기위관공실, 공회관공실), 1부(당무부), 11처(법규처, 계획서, 재무회계처, 인사교육처, 통항관리처, 선박감독처,

가 2005년에는 약 1,005억불 규모로 확대되어 20배 이상 증가되었음.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수출입을 합쳐 우리나라의 첫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olitics/serv2-72-01.aspx?bm=2&sm=3&fm=2> 참조(최종검색일: 09.8.31)

선박검사처, 선원관리처, 항로표지처, 안전관리처, 감사처), 14개 성(省)단위 해사국이 있고, 그 하부에 97개의 지방해사국, 지방해사국의 관할하에 부두별로 여러개의 해사처(출장소)가 있다. 해사국 총책임자는 국장(차관급)이며, 그 아래 4명의 부국장이 있고, 부국장 아래 처장(과장급)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2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300여척의 순시선을 보유하고 있다.

.....(중략).....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양사고를 해사국의 안전관리처에서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지방해사국의 1차 조사와 성급해사국의 2차 조사에 불복하는 경우 해사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어선 단독사고 또는 어선간 충돌사고는 농업부(어업국) 소관사항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과 상이한 점이 있다.

.....(중략).....

III. 분산된 해양관리체제의 문제와 해법

1.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현황

.....(중략).....

<중국의 주요 해양관련 분산 기능 및 기관>

주관 부문	관리 영역	집법기구
국가해양국 (國家海洋局)	해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사안을 조정, 해양조사, 과학연구, 관리, 서비스지원(해양사업에 대한 정책, 법규발전계획 수립, 해양관련 외사에 참여, 해양 식유오염 및 해양폐기물 오염관리)	해양국 및 각분국, 중국 해감선
농업부 (農業部)	어정관리(어항, 어장감사, 어항환경 및 어업자원 보호 등)	어정국, 어정선분국, 어정선
교통운수부 (交通運輸部)	선박관리(선박검사, 항구감독, 해상교통안전, 해사 및 상무해사처리, 안전지휘, 해운환경보호 등)	항감선, 선검국, 항검선
국가환경보호국 (國家環境保護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원오염 관리	국가환경보호국
해군(海軍)	해양수호, 어업보호, 항로보호, 해도맵핑 등	순시부대, 해군본부
해관(海關)	해상밀수 관리	밀수관리선
위생부(衛生部)	검역	
공안부(公安部)	해상안전	해양순시부대
수전부(水電部)	수자원종합이용 및 수리공정 관리 및 검사	
경공업부 (輕工業部)	염전업무	염전국
교육부(教育部)	해양고등교육원 계열	
기상국(氣象局)	해양기상업무관리 및 서비스	

.....(중략).....

2)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제43조, 해상교통사고조사처리조례 및 내해해상교통사고처리규칙 참조. 자세한 내용은 중국정부법제신식망 인터넷웹사이트 <http://www.chinalaw.gov.cn/> 참조할 것.

V. 결 론

이상에서 해양정책을 수행하는 중국 행정조직 등 관련부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분산된 해양관리체제의 문제점과 최근 동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중국은 섬해오통으로 대표되는 해양관리 5대 기구를 포함하여 총 12개 부문의 15개의 집법기구에서 해양관련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중이다. 이는 곧 해양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 저하의 요인이 되며, 해양관련 법률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해양관리 집행력의 저하로 이어져 각 부처간의 이익갈등 등의 관리역량이 저하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업무 통합관리기구 신설, 해양기본법 제정 그리고 국가해양발전전략의 수립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략).....

결국 해양강국 실현의 동력이 될 “해양중합관리체제”의 실천을 갈망하는 중국 각계 인사와 지도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으로 미루어 볼때, 중국의 해양중합관리를 실천할 막강한 기구 설립은 그다지 멀지 않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대항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중국해양국, 중국해양발전보고(China's Ocean Development Report) 2009, 해군출판사, 2009.
- [2] 무라타 료헤이,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청어, 2008.
- [3] 김재철의 3인 공편, 신해양시대 신국부론, 나남, 2008.
- [4] 이흥표, 중국이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5] 김중두, 중국해양전략론, 문영사, 2002
- [6] 한국해양연구소, 중국의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소, 1999.
- [7] 이춘근, New Ocean Era & Maritime Security,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8] 양희철의 3인, 중국의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March 2008, Vol.30(1): 89-107, 한국해양연구원.
- [9] 박성욱의 1인,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March 2008, Vol.30(1):119-128, 한국해양연구원.
- [10] 박문진의 2인, 한·중·일 해상집법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제12권제2호, 2006